

“혹시 코로나?”...환절기 감기·알레르기 환자 ‘혼란’

광주 계절성 호흡기질환자 10~20% 늘며 시민 우려 높아 찜찜한 마음에 병원 방문 잇따라...방역당국 매뉴얼 시급

10월 들어 감기와 후두염, 알레르기 비염 등 계절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호흡기질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가벼운 호흡기 증상에도 “혹시나 코로나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우려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기와 독감, ‘코로나19’가 혼재된 상황을 감안, 호흡기질환자 진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이다.

21일 광주지역 병·의원, 약국 등에 따르면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한낮과 아침 간의 일교차가 벌어짐에 따라 지난 8·9월에 비해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10~20% 가량 늘어났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준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흡기질환 환자 수는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특히 이들 호흡기질환자 중 고열이나 몸살,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한 경우는 마치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

문에 큰 걱정을 안고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더불어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증상이 가벼운 감기 환자들은 자신이 감기일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찜찜한 마음 때문에 약국에 먼저 들러 약사와 상담한 뒤,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고열의 정도가 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할 환자의 경우, 의사의 선별진료소 방문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어서 감염될 리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위험한 사례마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는 받지만 자신의 동선을 밝혀

보이며, 코로나19 감염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먼저 떠내 의료를 당황케하기도 한다. 이번 주에만 두 번이나 내과를 찾았다는 김정인(80·광주 북구 각화동)씨는 “목안이 부어서 뜨겁고 불편해 병원에 갔다. 환절기만 되면 목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목감기로 생각되지만 괜히 코로나19면 어떻게 하나 싶어 걱정돼서 병원을 갔고, 다음날 또 갔다”고 말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정성수(82·광주 북구 본촌동)씨는 “일주일만 한 두번 이상 두통 때문에 힘든데, 요새는 사흘 이상 머리가 아파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린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다

가, 집 근처 의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 “코로나19로 습관화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면서 “감기에 걸리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세가 보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호흡기질환은 겨울은 물론 내년 봄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보건소, 병·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감기·독감·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 매뉴얼을 만들어 환자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보건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 기자 chaeh@kwangju.co.kr

양심적 병역거부 106명 26일 첫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목포교도소를 비롯, 3개 기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106명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포교도소에서는 올해 54명이 대체 복무 이행에 들어간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정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지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회(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 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며 “외출의 경우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역시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형령 의혹 광주인력개발원 직원 숨진 채 발견...경찰, 진상 조사

수십억원의 국가 보조금 형령 의혹을 받고 있던 광주 직업훈련기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A씨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광주인력개발원측이 지난 16일 업무상 형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점을 확인,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 광주인력개발원은 A씨가 오랜 기간, 보조금 25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미 숨진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의 형령 연루·무인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인력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구직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천을 맑게 21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 원지교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EM흙공'을 던지고 있다. 이날 광주천에 던져진 흙공은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수생종의 미생물이 들어있는 미생물 효소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만든 것으로 수질정화에 탁월하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검서 조서 사라진다

자백·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없애기...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 업무시스템 개편

광주지검에서 조서(調書)가 사라진다. 광주지검은 21일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서 없는 수사 환경’ 조성 등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 검사장은 당시 취임 일성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광주지검이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은 우선,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신 재판에서 직접 신문을 진술 증거를 활용한다. 그동안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는 자백과 진술 강요,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일각에서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광주지검은 이같은 인권침해 요인을 차단하면서 통신기술 발전으로 손쉽게 영상 녹화·녹음조사를 할 수 있는 점을 반영, “경찰의 수사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물적 증거를 직접 확인·수집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의 직고소·직고발 사건 담당 부서인 수사·조사과는 지난달 10일부터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필요 시 출장 조사나 녹화를 하고 있다. 피고인 신문이나 참고인 진술도 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검사가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확인하고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광주지검 입장이다. 광주지검의 새로운 수사 시스템으로 기존 서류에 의존하던 법원 재판 풍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영장 청구의 경우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검사가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혐의 소명 여부와 영장의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업무의 중심을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판 준비로 맞추고 업무 공간도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바뀌 운영 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직접 관여를 제도화하는 등 기소 검사의 공판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화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집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서류단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고) |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뇌물 받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장 실형

징역 5년 선고...향후 사업 진행 여부 불투명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향후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4억 7000만원과 추징금 2억3500만원도 선고됐다. A·B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2년 6개월, 공방 D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C씨 등은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개입하려다가 고소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돼 주기로 약속하고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측은 A씨 등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와 B씨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받은 돈 중 일부인 5000만원의 경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권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풍향동 일대 재개발을 통해 3000가구 가량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조합 임원들이 무더기로 해임된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